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

일시 | 2019년 11월 7일 14:00

장소 | 하자센터 하하허허홀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주제발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방안	3
--	---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지정토론

좌장 :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지역사회 연계 사례	25
----------------------------	----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31
--	----

김정현 (대전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자원 연계방안 토론편	37
--	----

고익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소장)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토론편	43
---------------------------------------	----

최영미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진입을 위한 교육청 지원체계	49
---------------------------------------	----

최효경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 연계 및 지원방안	55
-----------------------------	----

김도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량개발본부장)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 포럼

□ 개요

- (주제)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
- (일시/장소) '19. 11. 7.(목), 14:00~16:30 / 하자센터 하하히히홀(서울 영등포 소재)
- (주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세부 일정(안)

일시	세부일정
14:00	○ 개회 (사회)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00 ~ 14:10('10)	○ 환영사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4:10 ~ 14:40('30)	○ 주제발표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방안
14:40 ~ 15:40('60)	○ 지정토론 (좌장)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수영(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 김정현(대전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고의수(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소장) - 최영미(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최효경(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김도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량개발본부장) - 홍승표(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 - 김애영(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15:40 ~ 16:30('5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30	○ 마무리



주제 발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방안

김 현 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방안

김 현 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포용적 사회의 실현

외국인 이주민 인구는 200만을 넘어서 전체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는 20만을 넘어섰다. 2018년 현재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수는 2.2%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19, 행정안전부, 2018.11.1.). 다문화 가족 자녀는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아니라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다문화 인구는 당분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주민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넘어가는 시기도 곧 임박할 것이고, 인구의 구성은 그 만큼 더 복잡해질 것이다.

다문화적 상황에 노출되는 기회도 많아지고 다문화 감수성은 높아졌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역차별의 정서도 표출되고 있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다문화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일방적 동화기대’나 ‘이중적인 평가’ 등과 같은 반다문화적 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나 강화되는 등 얼핏 모순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전환기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의 흑인 미국인에 대한 태도는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다수의 반대의견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Kristof, 2015). 그린월드와 버나지가 말하는 뇌편향성의 존재를 지지하는 결과다(Greenwald & Banaji, 2014). 버나지 등의 실험에 의하면, (인종에 대한) 뇌편향성은 선천적인 것은 아니지만, 생후 3개월만 되어도 같은 인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만큼 조기에 형성된다(Greenwald & Banaji, 2014; Kelley et al., 2005; Kristof, 2015). 인종에 대한 뇌편향적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어 좀처럼 극복하기 힘든 후천적 성향으로 자리잡는 듯하다. 그런데 흑인실험집단으로부터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정 인종의 선호경향은 각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나지(Banaji) 등의 연구에서 미국 흑인집단만은 인종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흑인 그룹은 인종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서 흑인과 백인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Kristof, 2015). 이 연구결과는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경험이나 교육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동시에 보여준다. 어려서부터의 다문화이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하지만 다문화적 상황에서의 몇몇 이주민과 관련된 사건들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은 단시일내에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반면, 다문화 이해교육과 같은 가치관 교육의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안상수 외, 2015)가 보여주듯 경험이나 교육의 양이 어느 정도는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의 질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모든 교육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다문화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다문화 이해교육은 일반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제가 아니다. 동화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거나 단일민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불편할 것이 없는 반면, 다문화 이해교육은 기꺼이 받아야 할 만한 절실한 필요를 낳지 못한다. 사회환경은 점차 글로벌화 되어 가고, 해외여행이나 해외체류경험의 양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늘어나고 있고, 이 같은 자발적 경험들은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험이라는 한계가 있다(김현철, 2016).

다문화정책에 대한 투자가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옳든 그르든 일종의 박탈감이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 같은 강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반면, 다문화주의의 표방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만큼의 강한 내적 동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은 일방적인 동화에 대한 기대감이나 민족적인 정체성에 대한 경직된 사고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할 때 다문화수용성은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정서와 쉽게 충돌한다. 다문화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단일민족’이나 ‘순혈주의’와 갖는 관념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민족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아.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우리는 단일민족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곧바로 하나의 새로운 대안적인 민족정체성을 낳지는 않는다. 단일민족 신념의 파기가 곧바로 그간에 가지고 있던 민족정체성의 포기나 다문화주의의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민족의 개념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는 논란거리다. 민족이 그저 관념이 만들어낸 상상물인지(Anderson, 2004), 분명한 실체를 가진 고유의 것인지(신용하, 2006)는 단순히 학술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 던져져 있다(김현철, 2016).

의식수준에서는 용인이 되어도 실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 헤드스타트(Head Start)에 대한 데이비드 컵(David L. Kirp)의 제안은 다문화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효과는 늘 논란거리다. 그리고 늘 재정삭감의 타겟이 된다. 컵(Kirp)은 재정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교육 프로그램이건 보건 프로그램이건,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빈곤해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헤드스타트가 '반빈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로즈마운트 센터(Rosemount Center)는 부유한 동네와 가난한 라틴계 이민자들의 동네에 걸쳐 있는데, 부гат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모두 받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모두 평균 이상의 사회적 스킬을 갖추게 되었고,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다. 빈곤층의 부모들과는 달리 잘 사는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빈곤층의 자녀들도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컵의 주장이다. 하지만 소수자 우대정책이 역차별이라는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960년 소수자 우대정책이 실시된 이래 1974년 앨런 바키(Allan Bakke)의 역차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시작해서 2004년 백인 소녀 아비게일 피셔(Abigail Fisher)의 헌법 소원까지 미국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역차별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피셔의 연방헌법재판소 승소 이후 몇몇 주는 소수자 우대정책을 폐기했다. 미국사에는 다문화정책이 공생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다양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9년 4월에는 국민청원을 근거로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다문화 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껴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이민자간 원활한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9. 4.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은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시급하다.

다문화 정책 부문에서 유사·중복이나 총괄조정 또는 협업체계 부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교육부, 2019; 김이선·민무숙, 2010; 오성배·김현철·김성식·김재우·박새봄, 2013; 장임숙, 2013). 다문화정책이 체류, 노동, 교육, 복지, 보건, 문화 등 영역에 따라 다양한 개입주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정부, 시장, 시민사회 부문 간에 그리고 부문 내에서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상호 조정이 되지 못한 채, 또 각 부처, 기관, 조직에 따라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유사·중복 지원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비효율의 문제를 낳게 된다(장임숙, 2013). 이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하향식 정책추진방식 또는 과도 관련이 있다. 다문화정책이 압축적으로 성장한 때문이기도 하다(최무현·김경희, 2015).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퍼즐(puzzle)에 비유해서 이미 분포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퍼즐 조각처럼 정교하지 않으며, 정교하지 않다는 것은 사각지대와 중복수혜를 모두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보건복지부·덕성여대산학협력단, 2009)은 우리나라 정책추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축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다문화정책 뿐아니라 유아교육, 농촌 취약계층 지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주거복지 등 전 부문에 걸친 문제이다(강창연, 2006; 김미숙·배화옥정익중·조성호·박명숙·김지민, 2016; 송미령·조미형·심재현·유은영·김나리, 2016; 장명림·김은영·이정림·박수연, 2009, 최균·정경배·장진용, 2011 등).

애초부터 각 부처의 정책이 특성화되거나 다기능화되지 않았던 데 이유가 있다(보건복지부·덕성여대산학협력단, 2009).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이 특성화하거나 다기능화되어야 하지만, 사후적으로 각 부처의 정책을 특성화하거나 다기능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지자체는 위임받은 중앙부처 사업 뿐아니라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 결과 정책의 중복성과 분절성의 문제가 지역수준에서도 나타나는데,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부처와 관련된 지자체 내 여러 부서가 중복적으로 시행하면서 혼선이 발생한다(여성가족부, 2010:9, 장임숙, 2013에서 재인요). 더욱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이주민 공동체 대표 등 민간 부문에서의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최무현·김경희, 2015). 따라서 네트워크의 방식들은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보건복지부·덕성여대산학협력단, 2009).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 또는 사업을 상호 네트워킹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조정하는 방식의 상향식의 정책 추진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 지역 거너번스로의 이동은 세계적인 추세이고(최무현·김경희, 2105), 이미 국내적으로 많은 사업들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도 앞으로 상향식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특정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내 민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을 지역사회연계의 과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정책 및 서비스공급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조직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협력은 관련 조직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가능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지역의 사회자본 축적과 자산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만, 네트워크 내의 모든 조직간 관계가 반드시 협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장임숙, 2013). 따라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해가 있고, 그 장해요인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문화 관련 사업의 주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새삼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타기관과의 개별적인 협력관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장임숙, 201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노드(행위자 또는 자원 또는 기관)수이다.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가이다. 둘째, 링크(link)수다. 노드간의 사회적 연결(링크)수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수를 의미한다. 셋째,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이다. 네트워크 밀도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수를 가능한 최대관계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네트워크의 밀도는 연결의 정도 또는 수준 정도로 해석해도 좋다.

결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것은 노드수와 링크 수를 늘리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노드 수(자원수)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협력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노드 수도 달라질 수 있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드(자원)의 추가적인 발굴도 필요하다. 가장 좋은 범위에서 노드(자원)는 다문화 관련 기관에 한정되지만, 예를 들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에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나 직업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지역의 기업이나 소상공인도 포함될 수 있다.

링크(연결)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의 밀도이다. 네트워크 밀도는 네트워크 유형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정보교환’, ‘자료교환’, ‘인력교류’, ‘물적자원공유’, ‘재정지원’, ‘공동사업 추진’, ‘행사참여’ 등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구본진 등(2015)은 다문화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가장 활발한 협력유형은 자료교환, 정보교환, 인력교류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연결정도(밀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과제로 남아 있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네트워크 유형 및 내용〉

유 형	내 용
정보교환	다문화관련 정보, 조언, 아이디어 등을 직접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교환
자료교환	발간자료, 브로슈어, 학술자료 등을 교환
인력교류	직원,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을 파견하거나 지원
물적자원공유	기관 간 시설, 장비, 차량, 사무실이나 작업장 등 물적 자원을 공유
재정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등 지원, 후원금 및 운영비(인건비, 물품, 도서구입 등) 지원
공동사업	기관 간 공동사업,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을 기획, 수행, 공유
행사참여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회의, 워크숍 등 참여

출처 : 구본진 · 이연옥 · 장덕현(2015). 다문화지원기관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p.409.

같은 네트워크 유형이라도 연결의 정도(밀도)는 다를 수 있다. 정보교환의 횟수가 밀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횟수와는 관계없이 정보교환의 질적 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각각의 기관(노드) 간에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또한 네트워크 밀도가 높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응답자에 의해 노드가

평가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등 실제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고, 전체 네트워크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이수상, 2012: 147-148, 구본진·이연옥·장덕현, 2015에서 재인용). 단순히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란 네트워크의 노드와 링크 그리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그 변화를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네트워크 분석만으로는 피상적인 관제만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어떻게 지역사회 기관간의 연계 또는 네트워크가 변해가는지 질적인 변화에 대한 관찰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모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이다(최무현·김경희, 2015). 첫째, 지역사회 내 단체 또는 기관들간의 경쟁과 대립의 양상을 띠는 경우이다.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은 각종 협의체의 활동을 비롯하여 상호이해의 부족, 정보공유의 부족, 사업조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긴장과 갈등을 유발된다. 둘째, 협의체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더라도 그 조정기능이 약한 경우이다. 형식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우이다. 셋째,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협의체는 없지만, 사회복지협의체 등 다른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어 굳이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 없는 경우이다. 넷째, 사업추진 인력의 업무과중이나 노동조건의 등의 격차로 원활하게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다문화정책 이외의 많은 사회정책 서비스 부문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지역적 맥락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네트워크 간 갈등상황이 있을 수 있고, 기존의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의 네트워크들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만일 지역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둘째, 지역의 맥락에 맞게 네트워크를 운영하더라도 지자체나 지역의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처로부터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중앙으로부터의 하향식 지원방식이 아닌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향식 사업추진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중앙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모든

문제를 지역에서 풀 수 없고, 더욱이 중앙부처로부터의 기획된 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중앙부처 단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는 지역사회 자원간 연계의 중심이 되면서 중앙단위 협의체 또는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인력의 추가적인 배치이다. 네트워크 관리가 기존의 인력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업무가 될 때, 네트워크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추가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력의 부족 또는 소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기존의 네트워크로부터 충원되지 않는 필요자원(또는 인력)이 있다면,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서비스를 수행할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

3. 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제안¹⁾

사각지대 없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누구나 성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까? 중앙으로부터의 하향식 정책추진이 아닌 지역으로부터의 상향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역사회 안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지역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나 지원사항은 중앙단위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 내용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자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연계하는 것이 일차적인 사업의 틀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 자원의 양이 다르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수준도 다르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모든 지역사회 자원을 빈틈없이 연계할 수는 없지만, 지역사정에 맞게 최대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1) 사업의 제안은 2020년도 여성가족부가 확보한 예산항목에 준하여 작성하였음(예산항목: 급식비, 센터운영비,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

둘째, 지역사회자원 자원연계로도 지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리고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 또는 활용이 필요하다. 2020년 예산에는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가칭)’ 명목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서도 확보되지 않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전문인력은 사업주관기관이 다른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사회 맞춤형의 서비스여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방식도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도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네트워크가 강하거나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줄 수도 있다. 네트워크가 없는 곳이라면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도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중심으로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진로교육 전문가가 가장 부족하다면, 진로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심리정서지원 서비스가 가장 취약하면 심리상담서비스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업추진 기관의 사업담당 인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업추진의 또 다른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은 강사나 전문성을 갖춘 기존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의 추진이 운영기관의 업무과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도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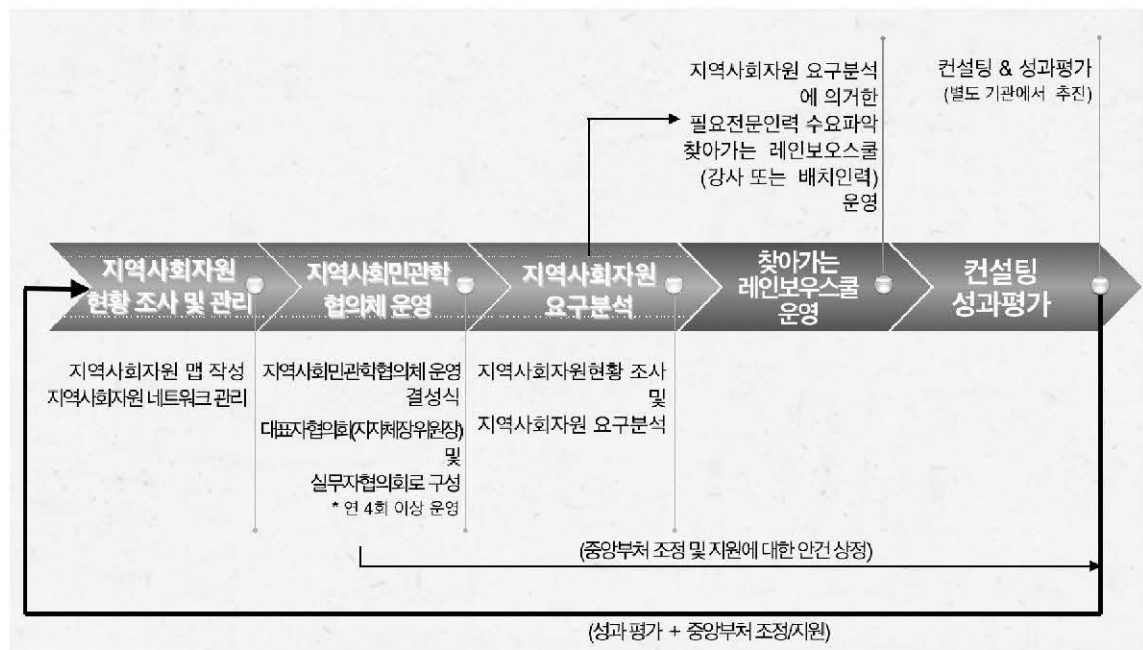
이 네 가지 원칙 하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업추진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사업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

지자체와 지역에서 가장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잘 되어 있고, 또 용이한 기관이 함께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자체장이 맡아야 한다. 지자체장의 관심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무지원도 동반되어야 하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의 주체가

되거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면 좋지만, 전담공무원이 아니어도 담당 공무원이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여성가족부 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가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협의체 구성에서부터 사업진행 과정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정부합동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시범 사업 지역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사업주관기관은 지역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자원과 네트워크 그리고 역량을 갖춘 곳이 말아야 한다. 2020년 예산안 기준으로 볼 때 사업주관기관이 해야 할 과업은 ‘급식비 지원’, ‘센터의 운영’,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 운영’ 등이다.



〈사업추진내용〉

(2) 급식비 지원

사업주관기관의 서비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사업주관기관 자체 운영 서비스 대상에 한정할지 지역내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집행할지 여부 등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고 지자체 또는 여성가족부와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센터의 운영

사업주관기관(센터)에게는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 제반사항(급식비지원, 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배치 및 인건비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규 인력의 배치나 사업 전반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팀장급 이상의 인력 수급을 위한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신규인력과 코디네이터 운영을 어떤 구성으로 배치할지(신규인력 2명+코디네이터 또는 신규인력 1명+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지역과 센터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요건을 유연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 운영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가칭)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레인보우스쿨과 달리 센터가 지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위한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운영 하느냐가 관건이다.

먼저 지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영역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눈다면, 첫째,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둘째, 학습지원 영역, 셋째, 심리정서 지원의 영역, 넷째, 진로교육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법률지원, 건강지원, 통번역서비스 등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입국초기부터 취업하여 자립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입국초기 법률지원, 건강지원, 통번역서비스 등이 필요할 것이다. 각 영역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용한

지역사회 내 자원현황을 파악한 후 협의체 운영과 자원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간 시너지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보강해야 할 서비스를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로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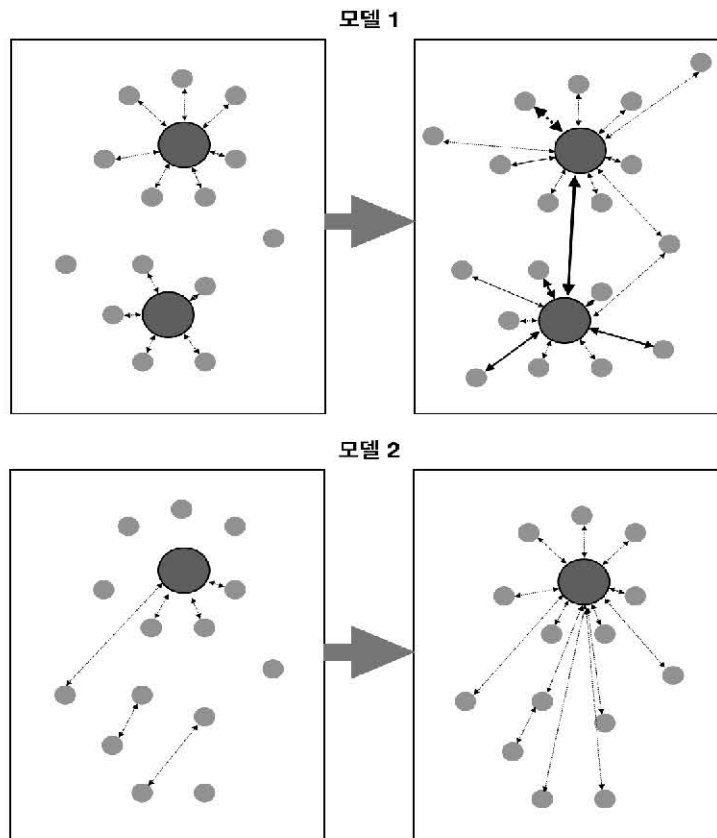
해당 지역의 경우, 심리정서 지원이 가장 취약하다면, 상담사 인력을, 진로교육이 취약하다면 진로교육 전문가를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을 통해서 충원하는 방식이다.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교육, 학습지원, 심리정서, 진로교육 등 어느 영역의 서비스를 보강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자원분석의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중언어강사나 매우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면, 놀이치료사나 통번역사, 다문화이해 교육 전문가도 가능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복수의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서비스 영역에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지역맞춤형 서비스 방식이어야 한다.

서비스 영역	자원현황(맵)	자원은 충분한가? 자원간 연계는 충분한가?	신규투입 필요 자원은 무엇인가?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쿨)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한국어학교 등		
학습지원	대안교과수업 현장체험학습 등		
심리정서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center 정신보건센터 등		
진로교육	대한상공회의소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기타 (법률/건강/ 통번역지원)	통번역사/보건소/다문화가족지 원센터/드림스타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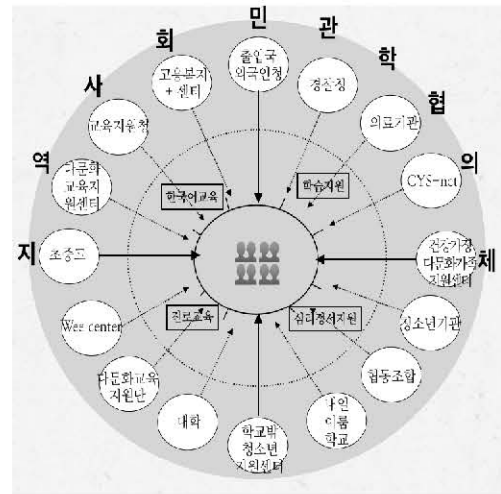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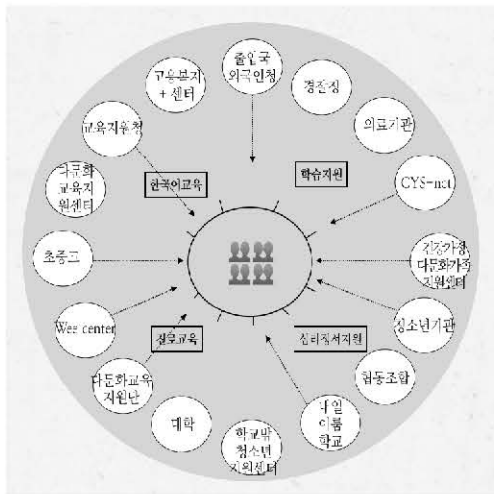
〈서비스 영역 및 지역사회 자원 현황 분석〉

(5) 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의 운영은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에 이미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기존의 협의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모델 1).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협의체 구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모델 2). 협의체는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형식적인 MOU 체결에 머무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협의체 운영의 핵심은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있다. 노드(자원) 수를 늘리고, 링크(LINK, 연계)의 밀도를 높이는 것(자원간의 연계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협의체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다. 밀도(자원간 연계의 정도)는 정보 및 자료교환, 인력 교류, 물적자원 공유, 재정지원, 공동사업 수행, 행사참여 등 다양한 수준에서 측정될 수 있다.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교류의 횟수가 늘거나 교류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고 참여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서비스의 강화)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네트워크) 운영 모델〉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강화〉

사업초기에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사업주관기관과 지자체는 지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현황을 파악해야 한다(자원맵의 작성). 잘 연계되어 있는 자원과 그렇지 못한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노드(자원)수를 늘리고, 링크(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협의체의 첫 번째 기능이다.

협의체의 두 번째 기능은 지역내에서 자원연계가 한계가 있거나 지역(지자체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부합동지원협의체(또는 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일이다.

(5) 정부합동지원협의체 및 중앙지원단의 역할

정부합동지원협의체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등 관련 중앙부처간 협의체로서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부처간 협업이나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정책의 조정, 정책사업의 개발 등)를 취한다.

중앙지원단은 중앙부처 담당자를 포함하여 중앙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협업을 통하여 지역단위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6) 컨설팅단의 역할

컨설팅단은 본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의 기관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다. 컨설팅단은 지역사회 연계를 촉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컨설팅은 협의체 회의나 지역사회 기관간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단은 일종의 중앙지원단의 성격을 갖는다.

참 고 문 헌

- 강창현(2006). 지역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조정, 네트워크. 『한국행정논집』. 제18권 제2호, pp.561-584.
- 교육부(2019).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구본진·이연옥·장덕현(2015). 다문화지원기관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 pp.403-425.
- 김미숙·배화옥·정익중·조성호·박명숙·김지민(2016).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민무숙(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민무숙·홍기원·주유선(2011). 다문화·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철(2016).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방안. 2016년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다문화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 숙명여자대학교.
- 법무부(2019.4.12). “법무부, 관계부처와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 논의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 (보도자료).
- 송미령·조미형·심재현·유은영·김나리(2016).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용하(2006).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40(1), 32-58.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안상수·김이선·마정희·문희영·이명진(2015).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오성배, 김현철, 김성식, 김재우, 박세봄(2013). 『다문화교육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장명림·김은영·이정림·박수연(2009).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장임숙(2013).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3호. pp.693-716.

- 행정안전부(2018.11.01.).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66841에서 2019년 10월 28일 인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4.12). ‘법무부, 관계부처와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 논의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 (보도자료).
- 최균·정경배·장진용 (2011). 복지소의제층 상시 발굴·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방안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최무현·김경희 (2015).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안. 『공공사회 연구』. 제5권 제3호. pp.229-281.
- Anderson, B. (2004).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형숙 역. 나남.
- Greenwald, A. G. & Banaji, M. R. (2014). 『마인드 버그』. 박인균 역. 도서출판 추수밭.
- Kelly, D. J., Quinn, P. C., Slater, A. M., Lee, Kang, Gibson, A., Smith, M., Ge, L., & Pascalis, O. 2005. “Three-month-olds, but not newborns, prefer pwn-race faces”. *Developmental Science*, Nov. 8(6), F31-F36.
- Kristof, N. (2015.05.07.). “Our Biased Brains”. *New York Times*.
- Savidan, P. (2012). 『다문화주의 :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갈등과 인정의 방식』. 이산호·김휘택 역. 도서출판 경진.

지정토론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지역사회 연계 사례

김 수 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지역사회 연계 사례

김 수 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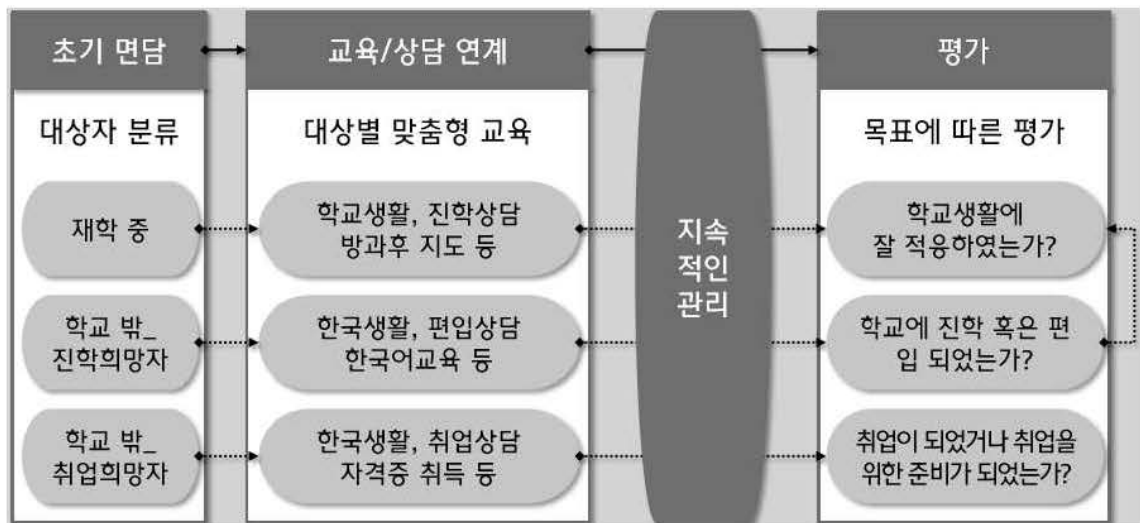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연계 개발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는 것에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써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번 계획이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발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합동 지원협의체를 제대로 세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 없거나 체계가 없는 곳에는 새롭게 체계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은 대표적으로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무지개센터 이외에도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가 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2018년 11월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를 발족하여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월 1회 회의를 통해 각 센터의 사례를 공유하여 해결점을 찾고, 각 지역마다 다른 상황을 논의하며 더 발전적 방향의 지원책을 고민하기도 한다.

청소년,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지역 자원 활용 없이는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연계와 관련된 논의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사례를 발표하고자 한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시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원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기관으로 2015년 9월 영등포구 대림동에 터를 잡고, 2018년 7월 문래동에 교육장을 추가 개소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870여명이 센터를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20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4년 넘는 시간 동안 센터 선생님들의 노력과 함께 해주시는 강사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시설로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센터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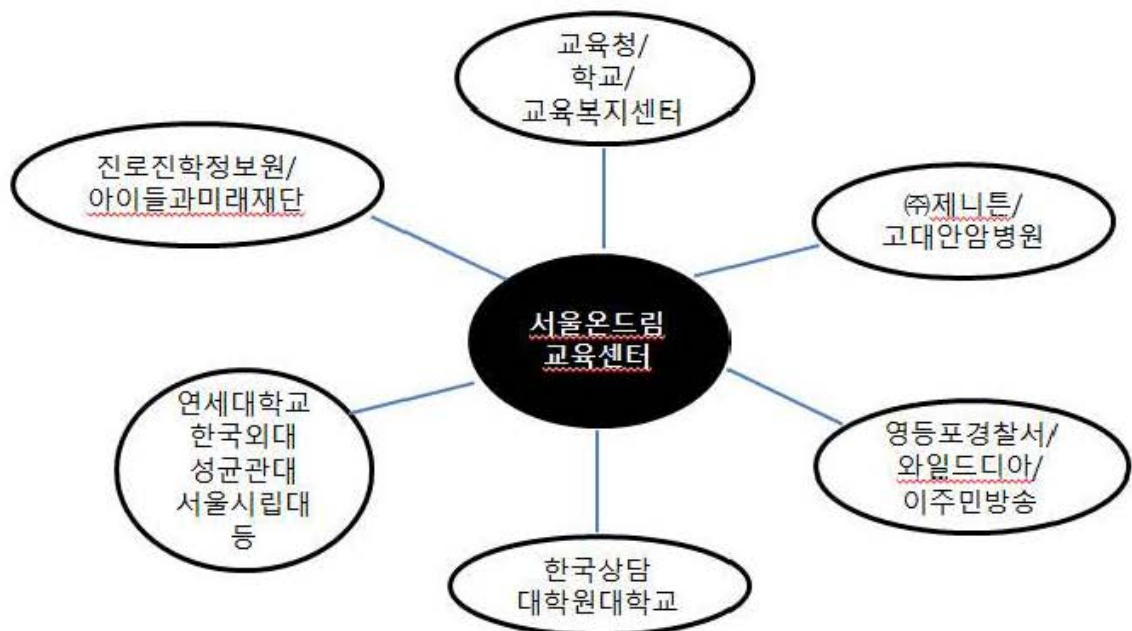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기본 사업 운영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센터를 찾아오면 학교 재학/비재학 여부를 확인해서 학교 안내를 하고, 학교에 재학하기 전까지 한국어 교육과 한국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며, 학교에 편입학 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생활 관리를 함께 하고 있다. 학교에 편입학 하기 어려운 경우는 학령기인 경우 검정고시(모두다학교)과정을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돕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은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에 서비스가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센터에 가장 중요하고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연계 기관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이다. 서울시 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하고 상시 연계를 통해 학교 편입학을 돕고 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사업 운영 과정〉

학교 편입학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편입하게 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역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기에 일선 학교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림중학교하고는 업무협약을 맺어 대림중학교에 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본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센터 사업소개, 센터 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담당 선생님들과 소통하여 이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많은 학교들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요청하며 방과 후로 본 센터로 학생들을 보낸다. 이렇게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인 본 센터가 같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돕고 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이러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기관과도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돕고 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상담자원활용을 통한 상담서비스,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또래친구만들기, 진학·진로 교육을 위한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의료서비스의 경우 2017년부터 치과의사들이 모여 만든 <제니튼에서 '해피스마일 치과버스'를 매년 2회씩 본 센터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고대 안암병원 꿈씨봉사단에서 매년 1회씩 본 센터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도와주고 있다. 둘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내 대학생과 연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간의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내 교양과목과 연계한 프로그램, 대학 내 봉사단과 연계한 프로그램, 대학생활에 필요한 소양 익히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진로·진학 코칭을 위한 진로진학정보원과의 연계, 다섯째,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즉, 영등포경찰서와 연계를 통한 안전교육 진행, 와일드디아의 협조를 통한 플라워아트교육, 이주민방송과의 연계를 통한 방송교육 진행 등이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지역연계현황〉

글 서두에서 말했듯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홀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키워낼 수는 없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손 잡아주는 지역기관과의 연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며 모든 아동·청소년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센터 자체의 노력 혹은 담당 직원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의 기관들이 그러할 테지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이며, 이들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합동협의체를 만든다하니 쌍수(雙手)를 들고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지위가 아직까지 없는 이들을 위한 협의체가 탁상공론이나 명함 주고받기 식의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논의가 되길 바란다. 일례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이룸학교의 경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의 체류자격을 변경시켜줄 수 있을만한 유인력도 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경우 연계할 만한 자원으로써의 위치를 상실한 것이다. 오히려 법무부에서 발표한 '9.2부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 의무 시행'에서 고등학교 학력 졸업자의 경우 F-4 자격을 준다는 것이 더 큰 유인력이 될 것으로 본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동포자녀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검정고시 과정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역자원이 될 것이다.

체류, 가족, 교육, 심리정서, 언어, 문화 등 복잡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즉,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무턱대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면 자원낭비만 될 것이다. 정확한 지역자원 연계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모인 현실적인 협의체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김 정 현

대전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김 정 현

대전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마련 및 이를 인지하고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의 핵심은 지역사회연계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된 사각지대 없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누구나 성장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시스템은 중앙으로부터의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으로부터의 상향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배치, 그리고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와 사업에 따른 담당 인력 배치여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는 바이다. 동시에, 이러한 원칙하에 제시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함께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의 무게를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중요한 과제로 시작되어, 제 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가 5대 영역 중에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른 세부 과제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 조성, 학업 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중도입국청소년의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확대 등이다. 따라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는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계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체계적·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공유해 보고자 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형 센터로서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의 파트너(partner)】**가 되어야 한다. 통합적 적용은 지원대상의 통합적 적용에서부터 지원 내용의 통합을 의미할 수 있다.

-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목되어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만 주목된 이유는 아마도 다문화 교육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보다 상위-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의 수혜자를 전 국민으로 확산시켜야 하듯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범주에 다문화가정 자녀 뿐 만이 아닌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가족이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즉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통합되어야 한다. 다문화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선진국의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으로 이민자 자녀와 가족을 위한 교육 서비스, 이민노동자 건강 및 교육 서비스, 직업 훈련, 난민과 망명자를 위한 건강 및 기타 비스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교육 이외에 수급 가족의 필요 평가에 따른 적절한 건강, 영양, 사회적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인지기발 등 사회통합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급식비 지원에 대한 사업추진 제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에 있어 지역사회 연계가 필수적인 이유는 당사자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물론 우리들도 함께**해야 하는 접근이어야 한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강화는 함께 하는 우리들을 모두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의 확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함께하는 참여가 필요하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형 센터로서의 지역사회 연계의 핵심적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계의 커넥터(Connector)】**가 되어야 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각 단계별로 성장함에 따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원활한 연계망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연계의 핵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커넥터(connector) 역할을 해야 한다.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는 **공교육 진입단계, 학교 적응 단계, 개발 및 실천 단계, 역량 강화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요구에 근거한 커넥터**로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특성 그리고 각 개인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희망을 존중하며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진입단계(예, 한국어교육지원), 학교 적응 단계(예, 개인 맞춤형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상담지원), 개발 및 실천 단계에서(예, 재능개발 교육지원), 역량 강화 단계(예, 진로교육지원)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개인을 지원하고 가족 간의 소통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각 단계별로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즉 학교현장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과 가정을 연결하는 역할과 함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가족과 커뮤니티간의 연결까지 지원하는 역할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가정이 서로에게 상호지지자와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모두가 우리나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삶의 질을 지향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당사자는 물론 함께 하는 우리 모두 가장 중요하게 공유해야 하는 부분은 가치평등이다. ‘다양성’이 ‘공존과 통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 행동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사회 통합의 파트너**,

지역사회 연계의 커넥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성공적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주의적 경향의 지원 체계가 아닌 함께 하는 우리 모두를 포괄하는 교육, 사회, 문화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단지 노력이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 연계망 구축이 중요하고 여기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핵심적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재는 성과에 대한 평가의 의미와 미래의 방향에 대한 출발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자원 연계방안 토론문

고 의 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소장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자원 연계방안 토론회

고 의 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소장

1. 들어가면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포함해 전체 26만 여명으로 국내 아동·청소년 12백만 여명과 대비해 2.2%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도입국청소년으로서 특성을 지닌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등이 증가하면서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어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학습능력과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중·후기 이주배경청소년은 직업기술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함께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을 향상시켜 안정적 정착과 건강한 성장기회 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 이주배경청소년은 학습지원(3.37점), 진로상담·진로교육(3.16점)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15세 이상 청소년은 직업기술훈련에 대한 요구(3.21점)가 높음(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조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심리정서 상담, 진로 및 직업교육 등이 수행되고 있다.

발제자께서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촘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활용과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우선 원칙 아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과 중앙지원 및 컨설팅 기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활용이라는 전제에서 추가적인 중앙지원 기능 부분에 대해 그 필요성 등에 대해 소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중앙지원 기능에 대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은 부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고 그 기간 방치될 수 있으며 부모의 이혼과 재혼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에 입국 후에도 양부모, 새 형제·자매와의 가족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불안정한 체류상태에서 학업과 또래관계, 진로·직업문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실정으로 이주노동 가정 등의 중도입국청소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 제도권 내로 편입되어 다양한 지원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도입국청소년이 입국 후 어떤 경로를 거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각 지역의 지원기관 등에 연계되어 서비스를 받고 공교육에 진입하며 안정적 체류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와 전달체계 상의 미비점 또는 서비스 사각지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파악 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지역기관 별로 한국어 교육과 진로·직업교육 등의 지원과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살린 교육교재 개발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 매뉴얼 및 평가도구 등의 수정·보완과 개발을 통한 전국단위의 공통적인 보급이 요구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심리정서적 불안과 장애를 갖고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중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는 주로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 부모의 재혼(국제결혼)이나 이주노동 등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와 맨 먼저 언어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50% 정도가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상담과 통역이 호환적으로 병행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풀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3. 토론자 의견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은 시혜적 관점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아닌 균등한 기회보장과 참여 촉진이라는 원칙을 갖고 중앙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중장기적으로 통합화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으로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경로와 중앙-지역 간의 자원연계 및 사각지대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 차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중앙과 지역기관이 어떻게 협업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공유되고 지역자원 연계와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기제를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센터 차원에서 각종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상담 통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에 대한 사례로 이주배경청소년이 상당한 서비스를 받고 성장하였음에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사회적응과 정착과정이 어렵다는 실례를 보여주는 현장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현장전문가 인터뷰 내용

이주배경청소년은 문화적 어려움이 있다. 위계가 확실한 한국사회의 인간관계를 어려워하고 존칭을 쓰거나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진로선택을 할 때 학력 및 자격을 중시하는 한국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회적 활동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인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출생하고 성장한 국가의 문화를 충분히 체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어느 사회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소외감 혹은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붙임]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지원 사례

<사례>

김OO은 중국에서 온 19세 청소년이다. 한국에 온지는 5년 정도이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얻어 일을 하다가 센터와 연계된 바리스타 학원이 운영하는 카페로 스카우트되었다.

그런데 일을 한지 1년째, 사례관리 차원에서 그 청소년의 근무상황에 대해 물었더니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그 이유는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태도, 말투, 안내 등)에 대해 손님들이 문제제기가 자주 있다고 이야기했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에는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카페 인턴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완전 다른 평가였다.

이 사례가 이주배경청소년이 바로 일상적인 소통에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실제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언어적 어려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이해를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익숙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나서 자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토론문

최 영 미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토론회

최 영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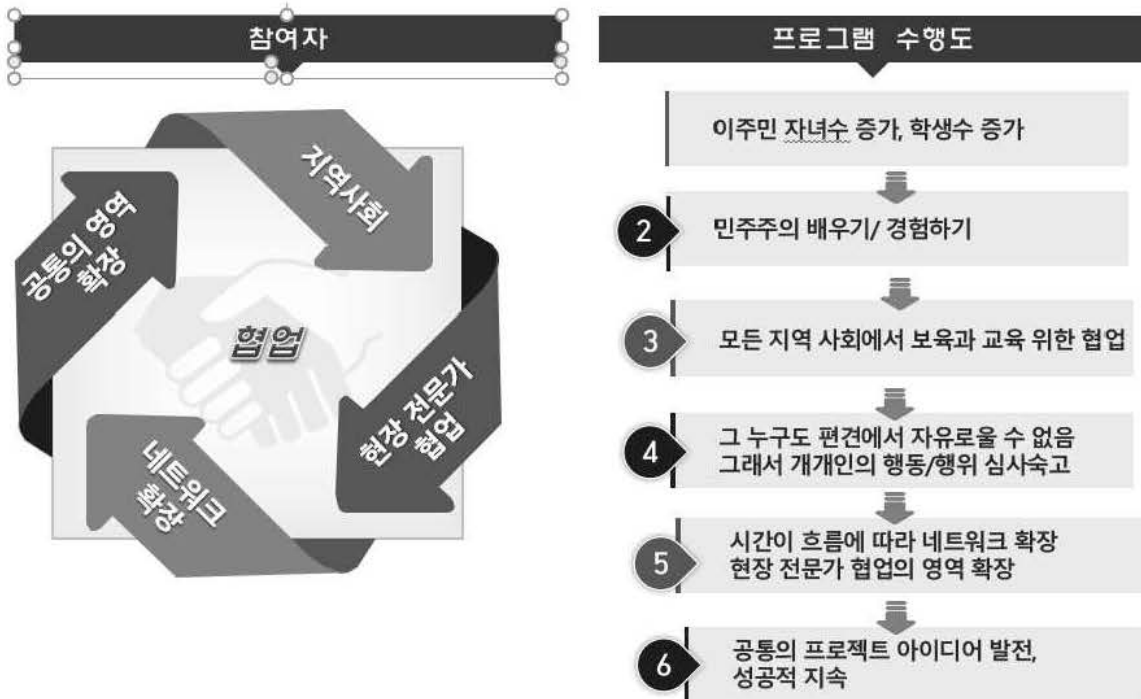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1990년대 후반부터 이주민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국정부는 한국 사회에 급격히 증가하는 이주민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을 검토했다. 정부주도의 다문화정책 및 이민정책은 실제로 한국사회 다문화사회로 발돋움 하는데 일조 했다고는 하지만 이에 따른 비판도 만만치는 않다. 이러한 중앙정부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연계”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될 수도 있다.

첫째, 이주배경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특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지역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 베를린 반겔지역 지역사회 프로그램 수행도



베를린 반겔 지역은 이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독일 3,40대 중산층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늘어났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원인이 된 것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낙후된 인프라였다. 따라서 도시복원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는 모든 지역 사회 내 보육과 교육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네트워크는 확장되었으며, 현장 전문가 협업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독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청소년들의 직업 및 심화교육을 위해 연방정부, 연방노동청, 주정부는 긴밀하게 연결된 지원정책을 결정하고, 연방의 지원정책은 교육체인 이니셔티브의 관할 아래에서 각각의 주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청소년들은 직업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게 되고, 독일 전역의 모든 학교에서(학교의 유형에 상관없이) 직업 탐색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받는데 이용된다.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학교, 고용기관, 직업센터, 청소년 보호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협력 모델 중 하나가 “한 지붕 아래” (unter einem Dach)이다.

모든 지원 활동의 중심은 청소년이며, “사후 교정 대신 사전 예방”이라는 지원철학에 따라 청소년들의 강점과 능력이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도구로 활용되고 직업교육 중도이탈 및 졸업 연기 등을 최대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교육체인 네트워크는 교사, 직업상담사, 취업동행자, 자발적 코치, 직업교육자,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300개 이상의 직업군에서 다양한 직업교육기회의 교육체인과 연계되어 있다. BMBF 2010은 연방정부-주정부-BA-동반자 그룹과 함께 전체 교육체인 코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부터 BMAS와 함께 공동책임으로 운영하였다. BMAS의 대표자, 16명의 문화부 장관(Kultusministerien der Länder), 경제장관회의(der Wirtschaftsministerkonferenz), 노동장관회의(der Arbeitsministerkonferenz), 연방노동청(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으로 구성 된 위원회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체인의 센터는 본(BONN) 지역의 직업교육연방연구소(BIBB)에 자리잡았는데 전문적인 지원과 이니셔티브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며, 연방노동청의 직업선택패스를 담당한다. 지역 파트너와 함께 교육체인의 센터는 관계부처와 실무자 간의 정보교환의 장소,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 다양한 행상의 경험 및 지식 교환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진입을 위한 교육청 지원체계

최 효 경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진입을 위한 교육청 지원체계

최 효 경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2019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33,482명, 전체 학생 수의 2.4%이며 3년 연속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다문화 가정 학생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내에 경기도 학교는 다문화 학교라 정의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

위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급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의 발전을 누구보다 재촉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국 시도에서 최초로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하였으며, 가장 먼저 ‘다문화교육 진흥조례’(2012)를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보편적 교육지원의 정책 철학 위에 ‘함께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다문화 교육 비전을 세우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시민교육으로서의 다문화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진입체계

기본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이전 국가의 학력증빙, 한국정주사실 증빙, 필수 예방접종 증빙만 있으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학구의 의무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다. 학생의 체류자격은 입학과 관계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것이라는 증빙만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안내는 해당지역의 교육지원청, 학교에 문의하면 직접 받을 수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도 학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입학을 거부하지 않도록 수시 장학을 시행하고 있다.

학력증빙이 어려운 이주배경 청소년은 즉시 공교육 진입이 어려우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학교 20곳에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경기도형 예비학교를 정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소 80일 240시간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경기도 다문화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력을 인정하여 공교육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적응체계

교육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은 크게 한국어교육지원, 한국문화적응지원, 학교생활적응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하여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 재학 비율에 따라 고밀집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교를 위하여 특별학급¹⁾, 한국어학급²⁾을 운영하여 단계적 학교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저밀집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교의 학생 생활 지원을 위하여, 단기 집중 과정의 한국어 강사 지원 사업(250교) 지원 중이다.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학생의 모국어 및 한국어 통역,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및 제2외국어교육, 학교생활 지원, 학부모대상 통역 및 번역 업무 지원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 중 경인교대 양성과정을 이수한 결혼이주 여성을 다문화 언어강사로 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 고밀집교의 공교육 적응 시스템〉

-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조기 적응과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 지역 초·중학교에 개설된 특별학급. 별도의 학급설치 및 교사 정원 배정. 일부 교과(국어, 사회 등)시간에 특별학급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을 받고, 예체능 수업 등은 원적학급에서 한국학생들과 통합 수업.
- 2) 다문화 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초·중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부 예산 지원의 보조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별도의 교사와 학급 설치 없음.

학교 취학 후 일반학급 입급	한국어 교실 지원	생활 지원
한국거주 사실 증빙	- 최대 3개월, 1대 1교육 - 한국어 교육 집중 지원 - 한국어 교재 및 교육과정 안내	- 학력지원(멘토링사업) - 생활지원(다문화언어강사)

〈이주배경 학생 저밀집교의 공교육 적응 시스템〉

학교 적응이 힘든 학업중단 위기의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9기관)을 지역별로 운영 중이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지원과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역의 Wee센터, 진로 상담 교사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주배경 학생들의 모국정체성을 유지하고, 비 이주배경학생과의 어울림교육을 위하여, 세계 시민 교육, 이중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국제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를 연구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이주배경 학생이 많이 재학 중인 학교에는 교사 정원 추가배치, 학급정원 조정, 행정인력 추가 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 지역사회 연계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시민단체, 대학과 연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한국어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지역 민간기관 9개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적응기간을 거쳐 다시 공교육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과 밖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지원을 위하여 2개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 밖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찾아내고 공교육으로 진입하도록 하는데 학교 시스템의 홍보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지역형 권역별 예비학교 2곳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4개의 대학과 연계를 통하여 다문화 밀집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및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 중단 요인 및 방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제안

모든 지원체계에 있어 가장 선제되어야 할 조건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있어 신분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의 신분이 국제결혼에 의한 중도입국자녀이든, 외국인가정의 자녀이든, 심지어 미등록 체류 학생이어도 교육지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학교가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을 지원하고자 할 때 기관에 따라 지원하는 학생의 기준이 달라 학교의 모든 이주배경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합동지원체계가 출범한다면 이 시스템에서는 적어도 미성년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의체는 각 기관의 사업설명회를 넘어서 과제(task) 중심의 실행 연구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목적이 없는 협의체는 매년 각 기관이 현황이 어떤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는 선에서 반복이 된다. 지역 협의체는 매년 지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각 기관이 협력을 이루어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발적이고 단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 체계를 통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하여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원스톱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스템 속에는 공교육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심리정서지원, 건강지원, 법률지원, 사회적응 지원, 학부모교육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지원도 포함이 될 것이다.

오늘의 포럼이 이러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 단계라 생각하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에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된다.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 연계 및 지원방안

김도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량개발본부장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 연계 및 지원방안

김도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량개발본부장

1.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실적 소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전국 214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음. 학교밖 청소년 지원 실적 관리를 위한 운영 중인 ‘꿈드림 정보망’에 입력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실적은 2018년 277명, 2019년 336명임.(학교밖 청소년 전체지원 인원의 0.62%~0.63%)

청소년 사례 등록시 필수적으로 대상청소년의 가정 상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지원실적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범정부적으로 학교밖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체계화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실적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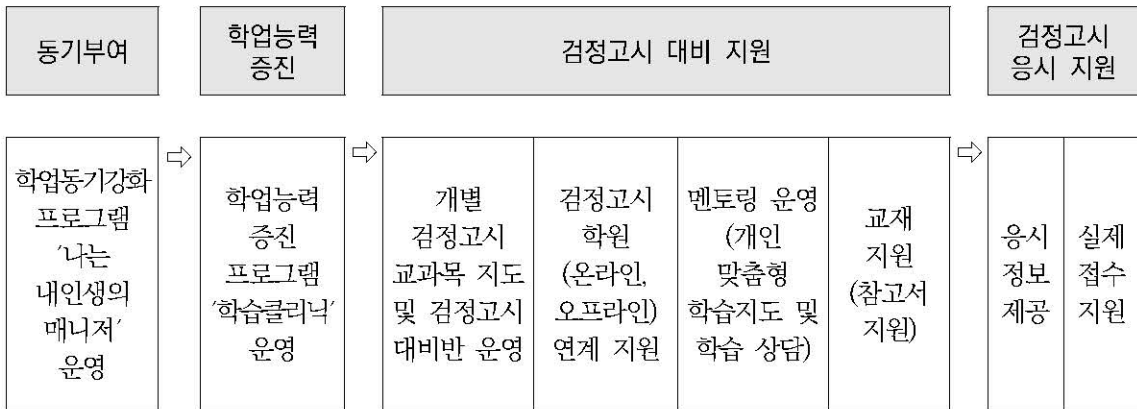
〈학교밖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10월 현재)	비 고
북한이탈 가정 청소년	87명	55명	사례 등록시 대상 청소년 가정 상태를 선택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다문화 가정 청소년	210명	187명	
중도입국 가정 청소년	39명	35명	
지원 인원 소계	336명	277명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전체인원	53,616명	44,831명	
총 지원 인원 대비 비율	0.63%	0.62%	

2. 이주배경 학교밖 청소년 대상 지원 가능사업

현재 전국 214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이주배경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제공 가능한 사업들임

2-1. 검정고시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 특성상 학교밖 청소년이 많을 수 밖에 없으며(통계에 따르면 2~3배 많다고 추정), 따라서 검정고시 지원이 매우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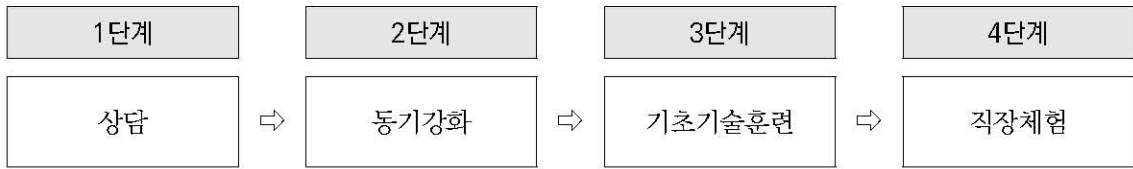
그 이외에도 교육부와 협업,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지원사업(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한 학력인정 경로 확대)을 수행중임.

2-2. 대학입시 지원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수능교재 지원과 동기 강화 및 진로 설정을 위한 대학탐방,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입시 전략 수립을 위한 1:1 맞춤형 입시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음.

2-3.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 전 직업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동기강화 및 취업의지를 고취하고 있음.

2-4. 자립 지원 프로그램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문화 예술, 체육, 봉사활동, 과학, 환경보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계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 삶의 만족도, 성취 동기, 진로 성숙도 향상시킴으로써 자립지원 촉진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또한, 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농어촌 학교밖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총3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음(다문화 청소년 9명 포함)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 관련 소견

3-1. 필수연계기관 관련

학교밖 이주배경 청소년인 경우에는 전국 214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앞서 제시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다만, 미인가 대안학교에 제학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되어, 연계 사각지대 발생 방지 필요.

아울러, 필수연계기관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일이룸학교는 사업 수행기관 성격 및 위상을 감안할 때 제외될 필요가 있음.

3-2. 지자체 청소년 사업 수행기관간 역할 조정 필요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인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도 중요한 고려점이라고 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망과 지자체 청소년지원망을 별개로 운영할 것인지,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3-3. 컨설팅단 운영 방식

컨설팅단을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한 경험에 따르면, 컨설팅단은 중앙지원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다만,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3-4. 중앙지원단 향후 수행사업 관련 권의

- ① 이주배경 청소년 중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권의(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실태조사 등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
- ② 이주배경 청소년 유형별(탈북, 다문화, 중도입국) 특성 및 니즈(필요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③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인권감수성 교육 매뉴얼 부재, 청소년용 / 청소년 가족용 집단프로그램, 학교, 지자체 등 종사자 매뉴얼 등)
- ④ 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수행 필요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

인 쇄 2019년 11월 7일 발행

발 행 2019년 11월 7일 인쇄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 6/7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